

한국사 속의 개방성과 폐쇄성: 세종의 이민족 포용정책의 역사적 의미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내용요약]

한국사를 보면 뜻밖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였음을 알게 된다.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기록된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교류와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그것이다. 문물의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이 들어와 왕이나 고위 관리가 되기도 했다. 신라의 최치원과 최승우는 당나라에 유학하고 벼슬을 하기도 했으며, 장보고가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해상무역을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고려시대에도 이세현과 이색 등이 원나라에서 활동하거나 과거에 합격하는 등 활발한 인적교류가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외침을 겪으면서(Hideyoshi shock, Manchurian shock) 우리나라는 급속히 폐쇄적으로 변해갔다. 병자호란이 끝난 지 얼마 후에 표류해온 하멜의 표류기는 그 당시 폐쇄적인 조선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폐쇄성은 정조(正祖) 사후의 천주교 탄압에서 불거져 나온 황사영백서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세도정치기의 일본이나 유럽의 이양선에 대한 쇄국 정책이 그 예이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나라를 이처럼 개방에서 폐쇄로 바뀌게 했나? 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당·송·원나라의 개방적인 국제체제가 명·청나라에 이르러서 폐쇄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 국제적 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로 하여금 개방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국가에서 중시한 이념이나 제도의 영향이다. 고려시대까지 중시되었던 불교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던 데 비해, 조선시대의 이념인 주자성리학은 국내의 이동(重農輕商)은 물론 국가간 교류(朝貢體制)를 최소화하고 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등 폐쇄성이 강했다. 셋째, 우연적인 변수로서 두 번의 대규모 외침과, 승려 내지 천주교인들이 종교적 목적을 위해 외세 개입을 요청한 사건도 우리나라의 폐쇄성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세종시대의 유연한 사대교린정책과 주변의 이민족, 특히 조선에 귀화하려는 외국인을 포용하던 모습을 보면, 쇄국의 역사보다는 개방의 전통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거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방적이고 외국인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국력의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것은 일찍이 세종이 지향했고 또 실현했던 '작지만 강한 나라[強小國]'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며, 오늘날의 '한류'의 물줄기가 지속적으로 흘러 인류 화합이라는 큰 바다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한다.

1. 쇄국의 논리

“지금 우리나라는 북쪽의 야인(野人)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동쪽의 왜노(倭奴)와 통신(通信)하는 등 수륙양면으로 연락(連絡)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성상(聖上)의 덕화에 의한 것입니다. 하오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족류(族類)가 아니어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이니, 와서 조공(朝貢)할 때에 이미 엿보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세종실록 28/05/10 丁丑)

1446년(세종28년) 5월 이선로(李善老)가 세종에게 ‘쇄국’을 제안하면서 올린 말이다. 그는 그 동안의 교린정책을 끊고 “일찍이 한나라가 했던 것처럼 국경을 닫고[閉關] 수어(守禦)의 방비를 엄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선로에 따르면 당시 조정이 취하고 있던 개방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나라에 저축이 없는” 실정에서 그들을 접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그들의 탐욕스런 요구가 끝이 없는데, “한정이 있는 물건으로 한이 없는 요구에 응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이 그것이다.

그 둘째는 국가기밀의 누설이다. 지금 나라살림이 어렵고 또 왕비까지 사망한 때를 틈타 외적이 침노할 우려가 있으니 “금년부터 야인과 왜노의 조공(朝貢)을 일체 모두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선로의 주장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선로의 이 주장 속에 전형적인 ‘쇄국의 논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정이 있는 물건으로 오랑캐들의 한없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경제적 이유와, ‘위태하고 약할 때에는 오는 것을 거절해 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危弱之時則拒其來而示強]’는 안보상의 이유는 17세기의 병자호란 때, 그리고 19세기의 개항기 때도 똑같이 등장했던 쇄국의 논리다.

이선로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의 신하들이 모두 “남쪽 왜인과 북쪽 오랑캐 중에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자가 심히 많은데, 한나라처럼 국경을 닫아 걸 수는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시대에 들어서 주변국 사람들이 귀화해 오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세종5년(1423년)을 전후해 “조선에서 살고 싶다”며 일본과 여진, 그리고 중국과 남만(南蠻) 지역의 사람들이 떼를 지어 들어오는 집단귀화현상이 그것이다. 그러면 세종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그런 개방적인 이민족 정책이 언제부터 ‘쇄국정책’으로 바뀌었을까?

2. 개방에서 쇄국으로, 그 전환의 시기와 요인들

우리 역사에서 이민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한참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에도 발견된다. 신라 제4대왕 석탈해와 호공의 존재가 그것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多婆那國)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왜국의 동북쪽 1천리 되는 곳에 있다.” 바닷가의 궤짝에서 발견된 그는 효성이 지극하고 재치가 뛰어나 제3대 박유리왕의 대신[大輔]으로 발탁되었다. 그 후 박유리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석탈해는 자기보다 먼저 신라에 정착한 이민족 출신의 호공(瓠公)을 대신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다(신라본기). 호공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호공은 원래 왜인으로, 박혁거세의 신임을 받아 사신으로 마한에 파견되기도 했었다(기이 제1). 요컨대 신라의 경우, 이민족이 들어와 왕이 되기도 하고 사신의 중책을 띠고 다른 나라에 파견되기도 했었다.

이민족이 신라에 들어와 정착한 일도 많지만 신라인들이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 공부하거나 벼슬한 경우도 적잖다. 최초의 중국 유학생 원광(圓光, 555~638)을 비롯하여 화엄종을 연 의상(義湘, 625~702), 당나라에 조기 유학하여 과거에 합격한 최치원(崔致遠, 857~?) 등이 그 예이다. 청해진을 건설해 해적으로부터 무역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동아시아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했던 장보고(張保臯, ?-846)는 그 당시 물적 교류의 활발함을 말해준다.

고려왕조에 들어와서도 이 같은 개방정책은 계속되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귀화하고 벼슬을 사는 경우와 고려인이 중국에 건너가 유학한 경우가 많았다. 956년 고려에 사신으로 왔다가 광종에게 발탁되어 과거제도를 도입한 후주(後周)의 쌍기(雙冀)가 전자의 예라면, 원나라의 패권질서(Pax Mongoliana) 하에 연경유학생이었던 이체현(李齊賢, 1287~1367), 이색(李穡, 1328~1396) 등은 후자의 예다. 원의 전성기에는 3만 여명의 고려 사람이 연경에 동시에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선왕이 만든 만권당(萬卷堂)은 고려인들이 “팍스 몽골리나의 핵심”인 연경에서 그야말로 ‘세계’와 만났던 정치 외교 및 문화의 창구였다. 그리고 그 만권당에 출입하며 엽복·조맹부 등 중국지식인들과 교류한 이체현과 이색의 활동은 고려의 개방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지영재 <서정록을 찾아서> 푸른역사, 2003).

그런데 그런 개방성이 조선왕조에 들어와 크게 줄어들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새롭게 중원의 패권국으로 부상한 명나라의 ‘해금(海禁)’ 정책에 기인했다. 명태조 주원장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외교”를 “번방(藩邦)은 다른 나라와 사사로이 교린(交隣)할 수 없다”라고 하여 금지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에서만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했다. 예컨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광동, 영파 등 지정된 항구에 도착하여 표문(表文-조공국의 국왕이 중국황제에게 바치는 외교문서)과 감합(勘合-조공국 선박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을 중국의 시박사(市舶司)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은 이후에야 북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김용구, <세계관충돌의 국제정치학> 나남, 1997).

이런 쇄국정책은 청나라에 와서도 계속되었는데, 특히 명·청 교체기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고집한 조선은 상당기간 청나라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급기야 청의 침입까지 받은 조선은 양란 이전에 취했던 것과 같은 이민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나 포용정책을 지속시킬 수 없었다.

병자호란(1636-37)이 끝나고 16년이 지난 1653년 8월 제주도에 표착한 하멜(H. Hamel, 1630-1692) 일행에 대한 조선정부의 태도가 그것이다. 하멜 일행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제주도 관원들에게 간혀있는 사이, 서울에서 내려온 “길고 붉은 턱수염을 한 남자” 즉, 같은 네덜란드인으로 먼저 표착해 조선에 귀화한 웰트후레이(J. Weltevree: 벨테브레. 박연)의 “단호한 대답”이 그것이다: “자네가 새라면 날아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련마는, 우리네는 이방인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네. 자네 의식주는 보장해 줄테니 이 나라에서 여생을 마칠 때까지 살도록 하게나.”(지명숙·왈라벤, <보물섬은 어디에>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209쪽).

‘이방인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조선의 국법은 몇 가지 사건을 계기로 강화되었다. 그 하나는 고려말의 ‘윤이·이초의 사건’이다. 공양왕 때 죄를 짓고 중국에 도망간 윤이(尹彝)와 이초(李初)는 명태조에게 ‘공양왕은 왕씨가 아니라 실은 이성계의 친척이며, 이성계 등이 장차 명을 치려하는데, 이색 등 고려의 재상들이 이에 반대하다가 유배되거나 살해되리라’는 말을 했다. 물론 이 사건은 명나라에서도 무고(誣告)로 인정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선건국 직후의 ‘표전문사건’(1397년, 태조6) 등에서 보듯이 이런

일은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었다. 세종 원년(1419) 이른바 ‘적휴(適休)의 사건’ 역시 그런 예이다. 묘향산의 중 적휴는 다른 8명의 중들과 함께, 세종 초년부터 본격화되는 불교교단의 축소 통합에 불만을 품고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도망하여 요동(遼東)으로” 들어갔는데, 독실한 불교신자인 명나라 영락제에게 “본국(本國, 조선)에서 불법을 높이지 않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세종실록 03/05/19 庚辰). 이 때 조선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사실을 명나라에 보고하는 한편, 중국 사신들이 오는 길목에서 불경을 외우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처럼 우연적 사건들에 의해 조선왕조의 폐쇄성이 촉진되고,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차단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정묘호란 때 후금의 군대를 안내한 강홍립의 사례나(1627년), 순조 초년의 신유사옥(1801년) 때 서양 군함의 도래와 포격을 요청한 황사영백서사건(1801년)은 그 대표적인 예다. 말하자면, ① 동아시아 패권국가의 성격변화(唐·宋·元の 개방성 → 明·淸의 폐쇄성)가 조선의 폐쇄성을 촉진한 ‘국제체계적 요인’에 해당한다면, ② 우리나라 내부의 정책 및 이념의 변화(불교·기독교의 개방성 → 유교의 폐쇄성)는 ‘국내정치체계적 요인’이라 하겠다. 그리고 전자의 요인이 고려에서 조선왕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면, 후자의 요인은 양란을 계기로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 전체를 통틀어 쇄국주의 국가라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임진왜란 이전, 특히 세종 때를 보면 물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인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유사옥이 발생하기 이전의 정조시대까지만 해도 ‘유연한 쇄국’ 즉 서학의 기적(器的) 측면(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이적(理的)인 측면(천주교)은 거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박현모, “세도정치기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4집4호). 그러면 세종시대의 대외관계는 어떠했으며, 세종은 이민족을 어떻게 대했는가?

3. 세종의 사대교린과 이민족 포용정책

세종시대의 대외정책은 한마디로 명나라에 대한 ‘지성사대(至誠事大)’와 일본·여진족에 대한 ‘강은양면의 교린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점차 중원대륙의 패권국으로 위상을 확립해가는 명나라에 대해 세종은 철저한 ‘강대국 동맹노선’을 택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중원의 북서쪽으로는 몽골족의 세력이 남아 변경을 위협하는 한편, 동북쪽으로 여진족들이 할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만간 명나라가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던 세종은 명황제의 무리한 주문과 사신들의 온갖 지저분한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재위 중반기의 ‘소1만 마리 매매요구’와 같은 사안에 대해 신하들은 거절하거나 협상하여 줄일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세종은 “소도 귀중하고 국가적 자존심도 귀한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여 국왕 자신이 소를 직접 점검해서 좋은 것으로 보내는 한편, 어려운 국내사정을 황제에게 편지로 적어보냈다. 이 같은 세종의 지성사대에 감동한 명황제는 2차분으로 장차 보낼 4천 마리를 면제해 주었다. 아울러 “이제부터 짐이 적시한 물목이 아니면 사신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여 명나라 사신들의 고질적인 폐단도 막을 수 있게 해주었다(세종실록 14/10/06 辛卯). 뿐만 아니라 조선이 여연지역 건너편의 ‘과저강 지역’을 토벌할 때는 여진족이 아닌 조선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대국 동맹노선의 이점을 세종은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다른 한편, 세종은 여진족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당근과 채찍’을 겸용하는 교린정책을

했다. 조공을 보내오면 받아들이고, 나라에 애경사가 있을 땐 예물을 주고받되, 국경을 넘어 약탈해 올 경우 ‘토벌’을 감행하곤 했다. 세종 초년의 ‘대마도정벌[東征]’(1419년)과 중반부의 ‘과저강토벌[北征]’(1433년)이 그 예이다. 이처럼 세종은 주변국의 약탈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으로 맞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포용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가뭄이나 홍수로 인접국의 식량사정이 어려울 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고, 불경과 같은 물건도 가능하면 요청한 대로 보내주었다. 주변국 사람들에 대한 관용적인 세종의 태도는 앞서 언급한 귀화인(歸化人)에 대한 우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전기 중에서도 특히 세종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집단귀화현상은 세종의 그런 태도에 기인했다. 물론 주변국인들의 귀화현상은 태조시대를 포함해 그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세종 때의 귀화현상은 그 이전의 것과 성격이 조금 달랐다. 우선 규모로 볼 때, 이전에는 대체로 개인 수준에서 투화(投化)했던 것이 수십 명씩의 집단 귀화 형태로 바뀌었다. 1423년 겨울에 바다를 건너온 대마도의 왜인 변삼보라(邊三甫羅) 등은 처자 24명을 거느리고 귀화해왔다. 귀화한 동기를 묻는 조선 관원에게 그들은 “본도(本島: 대마도)는 세금이 과중해 생계를 잇기 어려운데, 조선에서는 어진 정치[仁政]를 편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성덕(盛德)을 우러러 귀화해서 직업을 얻어 편히 살고 싶다”는 이들에게 세종은 양식을 제공하고 거처를 마련해주었다(세종실록 05/02/21 壬申). 강 하나를 사이에 둔 북쪽 지역의 여진족의 귀화는 더욱 빈번했다. 개별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추장들이 집단을 이끌고 귀순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주여진의 천호(千戶) 동화응합(童和應哈) 등이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는 “조선에 살기 원한다”고 한 것이 그 예다(세종실록 17/03/28 庚子). 재위 16년에는 여진족의 천호(千戶) 거기대(巨其大)가 “조선에서 통역관을 보내주면 무리를 이끌고 귀화하겠다”고 제의해오기도 했다. 당시 조선정부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단 국경을 넘어서면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위로하겠다”고 답변했다(세종실록 16/10/08 辛亥). 이처럼 주변국인의 귀화현상은 비단 일본인과 여진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명나라 사람[唐人]들과 동남아사람들[南蠻人]까지도 조선으로 귀화해왔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물설고 말도 선 타국으로 위험을 무릅쓴 채로” 떠나게 했을까? 세종은 첫째, 귀화한 사람들에게 집과 식량, 그리고 옷을 제공하는 한편 세금을 면제해 정착할 수 있게 했다. 세종은 또한 귀화한 이후의 정착 정도에 따라 귀화인을 3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했다. 즉 생계유지 단계, 우마를 기르는 단계, 그리고 “본국인과 같은 예로 대우”하는 단계가 그것이다(05/07/09 丁亥).

둘째, 세종은 “귀화한 왜인들도 곧 우리나라 백성”(세종실록 01/05/15 己未)이라 하여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다. “오랑캐를 변화시켜 백성으로 만든다”(세종실록 19/08/06 癸亥)는 자신의 정책기조에 따라 세종은 귀화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과 혼인해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벼슬을 주어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그들이 받은 벼슬은 대부분 도성의 호위나 변경의 병선관리와 같은 무관직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김고을도개(金古乙都介)의 경우처럼 정3품 상호군에 등용되기도 했고, 마변자(馬邊者)처럼 집단 귀화한 경우 고위직인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에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귀화한 왜인 피고(皮古)처럼 왜선(倭船)의 구조를 분석하여 우리의 배에 꼬리를 달게 해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게 한 경우는 상을 주기도 했다.

셋째, 연말연시에는 귀화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배려했다. 그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귀화인 활쏘기 대회 및 모구(毛毬)시합을 벌이기도 했으며, 정초의 조하(朝賀) 때는 야인·왜인·아랍인[回回人] 등 여러 귀화인들도 참석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귀화인들이 고향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녀오겠다고 말하면 허락하여 “정회를 풀게” 했다(세종실록 08/02/09 癸酉).

세종이 이처럼 귀화인들을 포용하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일본과 여진족들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왜선의 구조처럼 당시로선 신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수단적 필요성이다. 다른 하나는, 4군6진 등 북방을 개척한 가운데 주변인들을 이주시켜 영토를 굳건히 하는 한편, 여진족을 통합하여 명나라의 분할-지배정책을 극복해야 할 국방외교상의 필요성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종이 즉위교서에서 밝혔고, 명나라 조정에서 우려한 것처럼, 주변국 사람들을 포용하여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정치적 비전이었다. 즉 세종이 즉위 초 “인을 베풀어 정치를 펴겠다[施仁發政]”고 선언한 것처럼(세종실록 00/08/11 戊子) “천하의 인재들이 모두 그의 조정에서 벼슬하러 하며,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들판에서 경작하러 하며, 장사꾼들도 모두 왕의 시장에 물건을 쌓아놓으려 하는”(〈매자〉 양혜왕 상7) 나라의 건설이 그것이다.

4. ‘작지만 강한 국가’의 조건: 개방과 포용

“2004년 우리나라의 총 결혼 건수의 11.4퍼센트인 35,447건은 외국인과의 결혼이었고, 2005년에는 13.6퍼센트”로 증가했다. “농촌총각의 경우에는 27.4퍼센트가 외국인 신부와 결혼”했으며, “우리 사회의 소수인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2005년 말 3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김남국,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대응” <국회도서관보> 제 325호, 2006).

위의 글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나라는 더 이상 ‘순수한 단일민족’이거나 - 세종시대의 이선로가 주장한 것처럼 - ‘국경을 단아걸고 방비를 엄히 하면서’ 살 수 없다. 세계화 내지 신자유주의라는 진부해 보이기까지 한 슬로건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 민족끼리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잘 살고 싶다”는 이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존하는 이러한 이상과 현실 속에서 정치가들은 대외관계를 조절하고 국내의 소수 이민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소수인종에 대한 경계심 내지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다. 그것은 아마도 19세기 후반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도전, 특히 일제의 강점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민족적 감정인 것처럼 보인다. ‘적과 동지’로 나뉘어 대결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단결’이 강조되고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타민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배타적이지는 않았다. 특히 세종시대에서 보듯이, 이민족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19세기 말 이후의 배타적인 쇄국정책은 우리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라나 고려에서 보듯이, 인적인 측면이나 문물의 측면에서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때 국력이 신장되었다. 그리고 세종시대처럼 소수의 외국인들에 대해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정책은 주변국인들의 집단귀화를 초래했고, 이는 당시 명나라 조정으로 하여금 “조선이 장차 중화국가가 될 것”(세종실록 06/10/17 戊午)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기도 했다. ‘작지만 강한 국가’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과 차별금지라는 성숙한 태도에서 마련된다는 것을

우리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끝)